

교과서 난이도 양극화와 준교과서의 약진

글_ 백원근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일본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2003년부터 본격화된 ‘여유교육’ 정책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면서 교과서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지난 3월 29일 발표했다.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탓인지 평균 페이지가 대폭 증가했다. <이과 종합 A> 과목의 경우 2003년부터 사용 중인 현행 교과서보다 페이지 수가 17%나 늘었다. 이번 검정에서는 초·중·고 모든 교과서에 정부의 <학습지도요령> 범위를 뛰어넘는 ‘발전적 내용’ 추가가 인정되어, 학습량 30% 축소로 상징되는 ‘여유교육’ 방침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한다.

검정 대상은 주로 고교 1학년이 사용하는 필수과목 교과서로서 신청된 306종 중 검정 의견에 따른 교과서는 모두 합격했다. 대체로 연습문제를 늘리거나 친절한 설명을 붙이면서 교과서 두께가 늘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복습편을 도입부에 게재한 교과서도 여럿 있었다. 현행 교과서가 너무 어렵게 기술돼 있다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급적 배우기 쉽도록 배려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동일한 과목이라 해도 교과서에 따라 난이도의 격차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장 어려운 교과서의 경우 본문에는 ‘발전(심화)란’으로 내용을 보장하고 부록편에는 읽을거리를 추가해 수준 향상을 꾀했다. ‘발전’란을 둔 교과서는 이과 과목에서 그 빈도가 높았는데, 이를테면 <생물 I>에서는 직전 검정에서 <생물 II>의 내용으로 간주되어 삭제되었던 진화나 DNA 복제의 구조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같은 교과서의 전반적인 학습량 증대 추세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대중요법이 자칫 학생들의 ‘소화 불량’과 ‘결론 암기형 공부’를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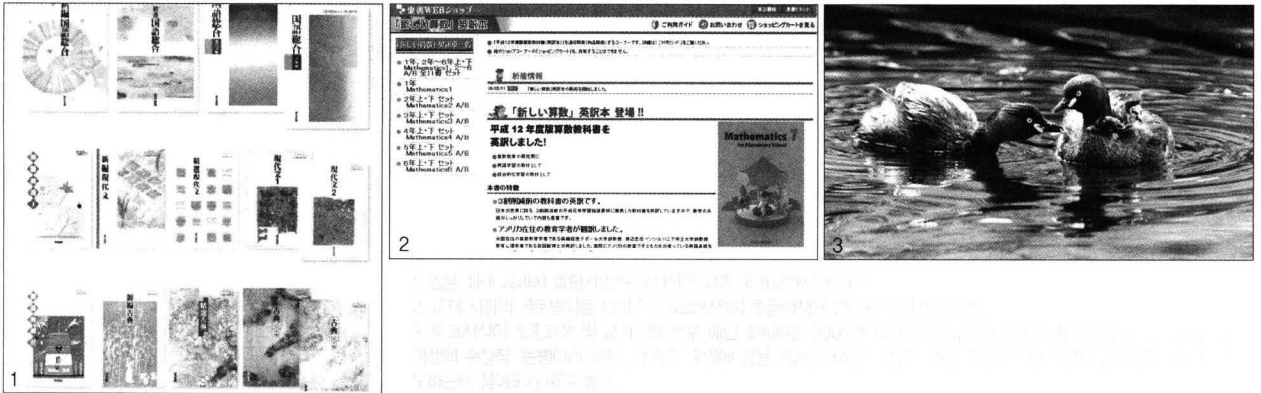
반면에 쉽게 기술된 교과서들은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층 얇아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력 수준 폭이 넓어진 현실에서 시험 압박감을 경감시켜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학생수 감소로 무시험 진학이 늘고 학생의 선택지가 다원화된 현실을 인정하지는 흐름이다.

때문에 동일 과목의 교과서를 펴내는 출판사라 하더라도 난이도에 따라 수준별로 3종을 한꺼번에 발행하는 곳들도 있다. 수준별 맞춤형 교과서의 진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교과서 영업활동 제한 폐지에 출판계 반대 입장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앞선 3월 중순, 공정거래위원회가 초·중·고 교과서 판매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규제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혀 교과서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공정위가 관장하는 ‘교과서 특수지정’ 제도는 교과서를 선택하는 교육위원회나 학교에 대해 출판사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접대를 하거나 타사의 교과서 채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제도 폐지 수순에 대해 출판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서협회는 제도가 폐지되면 교과서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출판사의 영업 능력에 따라 채택률이 좌우되어 교과서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전후 교과서 검정제도가 부활되고(첫 실시는 1886년, 재실시는 1947년) 1956년부터 오늘날까지 50년 간 시행중인 교과서 특수지정 제도가 교과서 판매시의 불공정 거래나 영업력에 의한 교과서시장의 과점화를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이다. 교



과서 업계 최대 출판사인 도쿄서적도 4월 12일자 성명서를 통해 “교과서의 공공성과 내용 본위의 선택에 위배된다”며 제도 폐지에 단호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규제 완화 추세 속에서 특수지정을 통한 규제의 필연성이 없고, 이를 폐지해도 예견되는 폐해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내려질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1만 2천 건의 검정(수정) 의견을 낼 정도로 교과서 내용에 대해 ‘공공의 입장에서’ 세밀한 정지작업을 하면서 판매시장만 자유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출판계가 울화통을 터트릴 법하다.

하지만 2006년 교과서 채택 점유율을 보면 1위 업체인 도쿄서적이 초·중·고 각 25.8, 26.4, 13.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상위 5개 업체 채택률이 초등 전체의 71.6%를 차지하는 등 이미 과점화 상태여서 업계의 주장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중·고교서 퇴장 학습참고서로 세분화

‘여유교육’ 정책의 영향으로 교과서 분량이 종전의 30% 정도 줄고 쉬위지사 세칭 명문고와 입시학원들은 교과서의 함량 미달에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성장한 분야가 준(準)교과서이다. 일반 교과서와 체계는 비슷하지만 난이도가 높고 내용도 풍부한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4년 전부터 발행된 《정예 고교수학》(數研出版) 시리즈는 교과서 감량 이전의 내용을 담아 현재 100여 개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도쿄신문 2006.4.7). 교과서에는 없지만 수험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과 체계적인 구성이 인기의 비결이다.

영어 과목의 《크라운 플러스》(三省堂) 시리즈는 사

립학교 등 약 60개교에서 사용되는데, 교사의 지도를 전제로 한 책인 만큼 시판은 하지 않고 학교 단위 주문만 받는다. 단어 수도 학습지도요령에서 정한 것보다 2천 단어나 많다.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삼는 학교들은 기존 교과서를 제쳐두고 아예 준교과서로 수업을 한다.

1세기 전에 등장했다는 학습참고서의 변화도 눈길을 끈다. 영어의 경우 본격적인 수험용 참고서의 효시로 알려진 1905년판 《영문해석법》부터 1970년대의 《시험에 나오는 영어 단어·숙어·문법》 시대를 거치며 영문학자 → 고교 교사 → 입시학원 강사로 스타급 저자가 바뀌더니, 1990년대 이후에는 컴퓨터 분석 데이터와 집단 저작 시스템, 비주얼한 편집에 밀려 저자 브랜드로 승부하는 종언을 고하고 있다. 수험생의 층위가 다양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모든 수험생 필수 참고서’가 아닌 학력 수준별 형태로 세분화되는 양상이다.

2005년도 일본의 학습참고서는 도서 전체 발행 종수의 5.2%, 발행 부수의 3.5%이며, 일반 서점의 매출에서 학습참고서·사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4.1%에 지나지 않는다. 학습참고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 출판과는 대조적이지만, 세분화되는 일본의 교과서와 학습참고서 시장 추이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출판**